

Welfare
Issue
Today

2014
5.14
vol. 14

복지이슈 Today

편집인의 글	3	세대 통합의 근본 대책 : 누구나 항상 인간으로 대우 받는 사회 / 김지영
이슈	4	[이슈 ①] 마을공동체와 세대통합적 관점의 지역복지 / 이수진
	5	[이슈 ②] 세대통합 관점에서의 가족복지서비스 / 김성은
	6	[이슈 ③] 서비스 디자인을 통한 전세대 친화적 복지 공간 만들기 / 이정규
	7	[이슈 ④] 전생애적 관점의 장애인 정책 / 전지혜
	8	[이슈 ⑤] 베이비부머 정책의 성공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 / 송인주
	9	[이슈 ⑥] 아동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제의 방향 / 정관영
	10	[이슈 ⑦] 관용과 존중, 배려가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복지교육' / 유연희
해외동향	11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노인을 위한 주거정책 / 전채경
	12	[영국] 맞벌이 가정을 위한 든든한 도움, 은퇴인력 양육 지원 / 전미양
	13	[독일] 지역사회에서의 세대 간 소통 프로젝트: 괴팅엔시 사례 / 박은정
	14	[프랑스] 사회연대성에 기초한 노인정책 : 개인자립수당을 중심으로 / 이은주
	15	[유럽연합] 세대 간 연대 강화를 위한 활동적 고령화(Active Ageing) 정책 / 전채경
	16	[일본] 세대 간 통합을 위한 '공생케어' / 김원경
	17	[일본] 개호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도시의 힘, 와코시의 개호예방정책 / 박지선
이슈와 통계	18	세대별 복지인식 : 복지증세와 복지재원 마련방안을 중심으로 / 현명이

복지이슈 Today

편집위원회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장, 장애인직업재활학 박사, 편집위원장)
김승연(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김지영(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위원, 교육학 박사)
안철홍(서울시복지재단 전략경영본부 기획조정팀 차장)
윤희숙(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정책연구팀장, 경영학 박사)
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정책학 박사)

집필진

김성은(가족세대통합연구소 서로이음 이사장, 가족학 박사)
김원경(일본복지대학 지역케어연구추진센터 연구원, 사회복지학 박사)
박은정(독일 보쿰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박지선(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초빙강사, 보건복지학 박사)
송인주(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노인정책팀 연구위원, 사회복지학 박사)
유연희(서울시복지재단 공공협력본부 장애인복지팀장)
이수진(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본부 복지공동체팀장)
이은주(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정규(디자인와우엔파트너스 부대표)
전미양(영국 요크대학교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전지혜(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 장애학 박사)
전채경(런던정경대학교 사회정책학 석사)
정관영(대한법률구조공단 제천출장소 법무관,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과정/사회법)
현명이(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 정책연구팀 연구위원, 사회복지학 박사)

세대 통합의 근본 대책

누구나 항상 인간으로 대우 받는 사회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쟁은 잠재되어 있던 세대 갈등을 수면 위로 올려놓았다.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너무나도 신속하게 만들어진 도입안에 의해 좀 더 빨리 표면화되었을 뿐,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된 나라들이 겪어온 세대 갈등을 피해가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하물며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사회임에랴. 이번호 「복지이슈Today」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연령별로 분절된 복지가 아닌 세대통합적인 복지정책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였다.

이슈1에서는 마을공동체가 세대통합적 복지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다. 이슈2부터 4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가능성을 가족복지와 복지공간, 그리고 장애인정책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슈5에서는 최근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베이비부머 정책의 성공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고, 이슈6과 7에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임에도 선거철이면 오히려 잊힌 존재가 되어버리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해외동향에서는 고령사회의 복지현안인 노인정책을 중심으로 어린이, 청년,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세대통합적 복지정책의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복지국가유형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대연대에 기초한 노인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프랑스의 정책동향을 처음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반갑다. 이슈와 통계에서는 세대별 복지인식의 차이를 복지증세와 복지재원 마련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령별·코호트별 인식 차이를 고려한 복지정책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만년의 저작 「노년」의 결론에서 '한 인간이 노년에도 인간으로 남아 있기 위한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라는 질문에 '인간이 항상 인간으로 대우받는 사회여야 한다.' 고 답했다¹⁾. 베이비부머의 문제이든 아동의 문제이든 어떤 연령집단의 문제도 그 연령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고령화와 그에 따른 세대 갈등 극복정책을 앞서 실천해 온 각국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일관된 해법은 바로 '사회적 연대정신'에 기초한 세대 간 협력이다. 각각의 집단의 정체성을 인정하되 공감과 우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 이것이 사회적 연대의 본모습이다. 각 세대는 현재의 연령적 특성으로 인해, 혹은 지금까지 겪어온 사회적·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고유한 삶의 방식과 특수한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받고 어느 연령에서나 어떤 처지에 있거나 모두가 인간답게 대우 받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세대 통합을 위한 진정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1) 시몬 드 보부아르 (1994) 「노년 : 나이들의 의미와 그 위대함」 책세상 . p.760.

마을공동체와 세대통합적 관점의 지역복지

전라남도 광주에는 '더불어 락(樂)'이라는 희한한 노인 복지관이 있다. 노인복지관임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어르신들이, 저녁에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주말에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저녁시간, 주말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어르신들이 맡는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사가 공간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고는 있지만 지역도서관과 카페를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강사도 어르신들이다. 서울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상상해보면 이러한 상황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도 부족한 복지관을 어떻게 어린이, 청소년, 가족까지 함께 세대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을까? 정답은 '지역과 공동체의 회복이다'¹⁾.

지역복지는 '전문 혹은 비전문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²⁾이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대상별 복지사업과 달리 지역복지는 지역성(locality relevance)을 중심으로 이들을 개별화하지 않고 통합적 관점에서 지역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한다. 즉, 지역복지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적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실천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개별사회사업(case work), 집단사회사업(group work)도 개인을 넘어 가족, 지역사회 접근을 중시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세대통합적인 접근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역복지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만 가능한 사업일까? 위의 '더불어 락(樂)' 노인복지관의 사례를 보더라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복지시설에서도 아래와 같은 과정이 수반된다면 충분히 세대통합적인 지역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

첫째, 복지시설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 공동

체 삶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르신인 경우 단순히 안락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기는 노년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웃과 마을을 생각하고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존엄한 노후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한세대를 넘어 통합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보아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이 추진한 사업이 지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스스로 평가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이러한 시도가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마을지향복지 사업 또한 이러한 기초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다. 복지관이 마을공동체 회복이라는 가치로 주민을 만나고, 조직과 연대하고,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직까지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복지관 참여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참여를 안내할 예정이다.

요즘처럼 한자녀 출산과 양육문제, 홀몸노인, 청소년 일탈, 청년실업, 고령화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복지서비스 확대로만은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지역을 중심으로 세대 간 상호협력과 돌봄 안에서 방향을 찾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단, 세대통합적 지역복지는 단순히 복지시설과 공간의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위적 공간의 통합은 오히려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세대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공통주체가 바로 '마을공동체'이다. 마을공동체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만나고, 소통하고, 공감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세대통합적 관점의 지역복지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글 _ 이수진

1) '더불어 락(樂)' 노인복지관은 '2013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 최우수상' 과, '2013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안전행정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광주지역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목 교과서에 우수사례로 실렸다.

2) 최일섭·이현주(2006),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25.

세대통합 관점에서의 가족복지서비스

현재 한국사회에서 핵심적인 복지관련 이슈 중 하나는 어떤 세대(연령집단 혹은 코호트들)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인가이다. 다양한 주체들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각 세대의 복지요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기에 좀 더 세대통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세대통합 관점에서 세대관련 복지정책과 서비스를 마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세대통합은 사회구성원들이 연령이나 세대 차이로 인해 제도적, 문화적, 공간적 분리나 단절을 겪지 않고, 함께 일하고, 배우고, 거주하고, 여가를 즐기고, 사회화되며 살아가는 것이다(Uhlenberg, 2000). 세대통합 정책과 서비스의 핵심은 첫째, 개인이 연령으로 인해 일자리, 교육, 여가 등의 기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하고, 둘째 일생을 통해 다양한 세대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iley & Riley, 2000). 이와 함께 세대통합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가족 내 세대(조부모, 부모, 손자녀 등)들을 위한 서비스인데, 이는 가족 구성원간의 결속이 사회적 차원에서 세대분리를 완화시키고 타 세대를 이해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Hagestad & Uhlenberg, 2006).

먼저 우리는 세대통합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의 마련을 위해 Generations United(이하 GU)의 모델을 검토하고 이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GU는 세대통합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단체이다. GU는 100개 이상의 아동, 청소년, 노인, 가족 단체들로 구성된 민간기관으로, 회원단체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차원과 가족차원에서의 세대통합과 세대관계증진을 위한 정책과 전략 및 프로그램을 제안·개발·

실행해 오고 있다. 또한 GU는 세대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제도나 정책들(세대형평성 모델 등)을 비판하면서 정부와 지역사회 등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GU의 모델은 세대관련 논의가 정치적으로 흐르고, 또 세대통합을 위한 노력을 '프로그램 실행' 중심으로 사고하는 우리사회에 세대통합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세대통합을 위해서 다양한 세대들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이 필수적인데, 다세대여가센터(multi-generational recreation/community center)의 건립이나 시니어시설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등이 좋은 예이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 시설에 세대코디네이터(intergenerational coordinators)를 두고 각 시설에 적합한 세대관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이가 세대통합의 핵심요소인 '가족 간 결속력' 강화를 위해 세대 공감과 소통을 위한 서비스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서적 측면에서 세대 간 호혜성은 높게 나타나지만, 세대 간 접촉빈도가 매우 낮고, 갈등이 높은 한국 가족의 현실에서 세대관계 증진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다. 조부모날을 제정하거나 조부모에게 편지를 쓰고 출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혹은 민간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부모/며느리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고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세대관련 복지논의가 세대통합의 큰 개념적 틀에서 진행되고 3-4세대가 보편화 되고 있는 가족들의 결속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좀 더 세대가 통합된 사회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글 _ 김성은

▶ 관련자료

Generations United 홈페이지 <http://www.gu.org>

Hagestad, G., & Uhlenberg, P. (2006) Should we be concerned about age segregations? Research on Aging, 28(6), pp.638-653.

Riley, M., & Riley, J. (2000). Age integration: concep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Gerontologist, 40(3), pp.266-270.

Uhlenberg, P. (2000). Introduction: why study age integration? The Gerontologist, 40(3), pp.261-266.

서비스 디자인을 통한 전세대 친화적 복지 공간 만들기

최근 디자인계에는 '서비스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민간 서비스 산업 뿐 아니라 공공복지 영역의 이슈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 산업이 팽창한 영국에서는 디자인 산업 조사에서 이미 '서비스 디자인' 분야를 독립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범죄 예방, 지역 불균형 해소, 세대 간 갈등 해결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그 원동력은 디자이너가 단순한 팀 리더가 아니라 사회복지사, 인문학자, IT 관련 엔지니어, 마케팅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디자인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우리 주변의 공공복지 공간 중 경로당과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디자인개발 사례를 통해 전세대 친화적 복지 공간 만들기의 역할과 가능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경로당의 사례는 주민참여를 통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된 공간이나 시설을 개선하는 디자인 방안과 경로당 이용자 및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간의 공감대를 모색하는 프로젝트였다. 그중에 18형 임대 아파트를 이용하는 경로당에서 문제를 발견하였다. 좁은 실내에 모인 15명 이상의 할머니 이용자와 경로당을 바라보는 이웃세대들은 시끄럽고 지저분한 공간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노인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비좁은 여가실의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세대 간 공감은 고사하고 오히려 갈등이 발생 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환경에 있는 60여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고 관찰한 결과 활력이 넘치는 한 경로당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오전시간에는 경로당과 도보로 10분 거리

에 있는 복지관과 복지센터에서 노인 여가 프로그램과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3시간 정도의 여가 시간을 경로당에서 이용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및 지역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세대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지자체, 노인 이용자,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었다. 물론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완벽한 대안을 만들 수는 없었지만, 경로당이라는 복지공간을 중심으로 세대 간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은 서비스 디자인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준 성과이다.

두번째 사례는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를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의 이슈를 도출하고 시나리오 형태의 최종기획서를 개발한 것이다. 요양시설 노인 수요자의 핵심 이슈는 신체적 요인보다 의외로 입소 후 가족 또는 친구들의 요양원 방문 횟수가 줄어 외로움을 느끼는 심리적 요인이 더 심각하였다. 또한 가족 중에 요양시설 수요자가 없는 일반 시민들은 세대를 막론하고 요양서비스 자체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요양시설에 계신 할머니를 방문하는 어린 손자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시나리오 동영상을 만들고 대학생, 주부, 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에게 이 시나리오를 발표하여 노인 요양서비스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대 간 공감대를 이루고자 하였다.

양질의 돌봄서비스의 기본요소인 세대 간 "존중"과 요양 수요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살필 수 있는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향후 보다 많은 서비스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전세대 친화적 복지공간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글 _ 이정규

▶ 관련자료

- 이정규(2014.2.6) 서비스 디자인으로 준비하는 100세 시대 : 이용자 중심의 경로당과 요양원 개발사례. 「100세 시대를 위한 디자인 세미나 자료집」, pp. 89-116. 서울디자인재단.
 산업통상부·한국디자인진흥원·디자인와우엔파트너스(2013) [2013 공공서비스디자인 혁신사업]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혁신과제. 수요자 중심의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디자인 개발.

전생애적 관점의 장애인 정책

장애인 정책은 사회복지의 어느 영역보다 전생애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등은 인생의 생애주기와 관련하여 특정 시기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있는 한편, 장애인복지는 태아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시기까지 장애의 이슈가 언제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많이 변화였지만, 기존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생애주기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지 못한 까닭 때문인지, 장애인을 분리 보호하는 형태의 제도들이 장애인 정책의 주축을 이루었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은 특수학교라는 틀로 분리 보호되었고, 청장년 장애인들은 보호작업장 등에서 분리 고용되거나 시설 내 장애인으로 보호된 것이 그 예이다. 문제는 이러한 분리 보호가 장애인들로부터 전 생애에 걸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과업과 기회들을 빼앗았다는 것이다. 시설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 집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수학교라는 환경을 벗어나면 갈 곳이 없거나,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성인장애인들은 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자격증 과정이나, 온라인 교육과정 등,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찾아다니면서, 직장생활과 같은 경험을 하기보다는 교육소비자로서 나이만 먹거나, 주간보호시설과 같은 지역 내의 소규모 시설에서 다시 분리 보호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애초에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전생애에 걸친 사회 통합적 성격의 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한 개인이 전생애에 걸쳐, 양육되고 교육받고 취업하고 가정도 일구며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과업과 리듬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장애를 가진 태아는 산전에 스크리닝 되어 출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산전검사가 장애아 선별 장치가 아닌 조기치료와 개입계획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정책입안자들은 장애 태아도 비장애 태아와 똑같이 태어날 권리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영유아기의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과 마찬가지로 신체적·인지적 통제력을 획득하는 것이 주요 과업이다. 조기교육과 재활치료에 대한 복지욕구가 높으며, 비장애아동과 어울릴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을 확대하고, 교사와 부모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학령기 장애인들은 진로문제나 자신의 장애 정체성에 관한 심리적 고민을 한다. 건강한 자아관을 갖고 당당한 장애인이자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 성인기 장애인들은 취업문제, 직업생활에 대한 적응문제, 자립문제, 결혼문제의 과업에 직면한다. 결혼과 출산 가정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부터 구직과 직장생활에 이르는 전영역에서의 지원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특히, 장애아동을 둔 가족지원정책들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데 반하여 장애를 가진 부모를 위한 서비스나 제도는 아직 부족하다. 장애 노인은 여타 생애주기에 비하여 의료적 지원과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다.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적절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다.

앞으로의 장애인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생의 과업을 수행해나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전생애적 관점의 정책을 통해 장애인들이 교육 소비자로서만 남거나 지역에 방치되지 않기를 바란다.

베이비부머 정책의 성공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

베이비부머는 아직 젊고 건강하며 의욕과 지적능력이 뛰어나 생산성과 능동성이 높다. 사회서비스의 주요 소비자이며,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고령친화산업의 잠재적 소비자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도 높고 자원봉사활동, 기부 등의 사회참여와 공헌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 '활동적 노년(active aging)'에 기반을 둔 정책적 접근이 잘 어울리는 세대이지만, 같은 세대 안에서도 자산과 사회적 지위에서 편차가 크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전통적인 효 사상에 의해서 여전히 대접받으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베이비부머는 다르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모들에게는 전통적인 부양의무를 지지만 자녀들에게 부양받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 노년과 구분하여 신노년층이라고도 부른다. 새로운 특성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무엇이며 더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서울시에서는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2014. 4. 14)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정책의 대상을 서비스의 수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응원해야 할 파트너이자 투자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사업운영의 관점과 대상에 대한 태도가 제시되어 있어, 대상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고 정책을 입안하려는 노력이 드러나 있다. 그 밖에 국내 지자체의 베이비부머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수도권 또는 광역단체(도시형)는 은퇴·생애 설계와 등 3기 인생대학, 자원봉사와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었고, 강원·충청·전라권 지자체(농촌, 도농, 기타)는 주로 귀농귀촌을 위한 유인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비슷한 내용의 교육이 많아졌지만 실행계획에서

얼마나 정책대상을 고려하고 있는지 드러나 있지 않으며 각 지자체별로 계획을 세웠기에 분절적이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고령자 서비스 사이트에는 5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집적되어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생애설계(University of third age), 기술 교육과 취업 훈련, 창업 지원, 공간 지원, 세무 지원, 창업 대출, 건강정보와 자가진단, 여가프로그램과 여행상품, 노인용품 판매 등을 공공부터 사적 서비스까지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용 섹션을 따로 두고 최근 이슈와 학술대회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정책대상의 욕구를 고려한 정보의 집적과 관련 네트워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면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고령자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베이비부머정책이 성공을 위한 다섯 가지 고려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노년인 베이비부머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둘째, 계획단계부터 이들을 참여시켜 주인의식을 높이고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셋째, 욕구에 맞는 카테고리별 개발하고 활용도 높은 정보를 가공하여 연계하는 서비스 정보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고용, 보건, 복지, 취미여가, 환경 등 공공 영역과 시장 영역에서 베이비부머가 다양한 수준(지원, 입찰, 제안 등)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다섯째, 실천가와 전문가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보를 집적하고, 유기적으로 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 _ 송인주

▶ 관련자료

정경희·오영희·이윤경·박보미(2011)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보도자료(2014. 4.14)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act=VIEW&boardId=19668

영국 고령자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ageuk.org.uk/>

아동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제의 방향

아동복지(서비스)법이라 하면 사회복지(서비스)법 분야에서도 후순위로 밀려 있다. 다행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아동학대, 보육, 양육 등 아동 문제를 가족구성원, 사회구성원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동법 제3조 제1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도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동법 제4조 제5호)¹⁾.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하는 것이 아동복지다(동법 제3조 제1호). 그러나 규범이 아닌 실제에서도 그러하지는 따져봐야 한다.

아동복지(서비스)법을 법학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아동복지서비스에 관한 실정법의 권리가 아직 확고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모든 법률관계는 권리의무의 대응관계이다. 개인이 국가 등에 대해 아동복지관련 법에 의한 법적 '권리'를 가질 때 국가 등은 그 서비스 내지 급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 등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국민은 사법적 구제 즉, 재판을 통해 이를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제방법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면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아동보호서비스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15조). 학대받는 아동 측에서 이 보호조치의무에 대응해서 국가 등에게 보호조치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²⁾, 이를 불이행 할 경우 소송상 다룰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를 실현할 수 없다면 실정법상의 권리라기보다 법률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소송에서까지 아동복지수급권이 실현 되어야 진정한 권

리라 할 수 있다. 현실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복지법제를 사회복지학, 행정학의 측면에서 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든 보편적인 모든 아동이든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급여와 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동정책의 큰 걸림돌이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통의 아동들을 위한 보편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어떻게 구상해 나갈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실질적인 급여서비스로서 보편적 복지제도의 대표적인 예로 아동수당법제를 들 수 있다.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아동복지선진국 모두 아동의 성장을 위해 급여를 지원하는 아동수당법제를 도입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우리의 경우에도 조세 부담에 대한 공론적 합의를 거쳐 우리나라의 수준에 걸맞은 아동수당법제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아동복지법제의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다. 국무총리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아동학대 등 현안에만 단기적으로 대응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각 부처의 정책을 통합하고 산재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공적 전달체계를 강화하거나 민간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부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동은 다음세대다. 자유롭게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아동 없이는 미래의 국가도 없다. 아동을 위하는 것이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포함한 모든 세대를 위하는 길이고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글 _ 정관영

1)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게 한다(동법 제3조 제1호). 반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한다(동법 제2조 제1호). 한편 민법에서의 미성년자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동법 제4조).

2) 아동복지법에는 위 의무에 대응하는 권리규정은 없다. 다만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이 명문화되어 있고(동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도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33조의2). 물론 권리규정이 없다고 의무에 대응하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관용과 존중, 배려가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복지교육'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995년 21위였던 사회통합지수가 2009년 24위로 떨어졌다. 경제 발전수준을 나타내는 성장동력지수가 20위에서 13위로 상승한 것과는 반대로 사회통합의 주요 항목은 순위가 하락했으며, 특히 관용사회지수의 순위는 25위에서 31위로 내려가 OECD 꼴지를 기록했다. 타인에 대한 관용과 존중이 부족한 사회문화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이다.

고도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발생한 도시화, 공업화는 국민의 생활을 크게 향상시켰지만 동시에 성공지향, 개인주의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였다. 여기에 급속한 노령화, 장애인 자립생활의 확대 등 변화된 복지상황은 개인을 넘어 지역 및 공동체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타인에 대한 관용과 존중이 필요한 사회에서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것은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더구나 아동·청소년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역을 이해하고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입시경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태도형성, 자아확립 등 균형 있는 성장기회를 갖기 어렵다. 인성교육, 실천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1995년 '5.31 교육개혁'을 통해 '학생봉사활동'이 시작되었으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복지교육을 통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

는 환경을 만들고,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국민이 사회복지문제에 관심과 이해를 깊이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반 시민에 대한 복지교육 이외에 특히 아동·청소년의 왜곡발달에 대한 고민과 앞으로의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학교에서도 복지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시설을 방문하고,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재가장애인 등을 방문하여 교류활동을 하거나, 학교행사에 노인, 장애인 등을 초대하기도 한다. 또한 모금활동, 청소, 인사하기 운동, 사회복지 행사나 수화강습회, 강연회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구성원과 교류하게 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별 목표와 과제수행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체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다.

미래사회를 위해 아동·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여 교육, 문화, 사회 전 분야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이다. 간헐적이고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과 시민의식교육이 아니라 교육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초·중·고 단계별 필수교육을 통해 시민의식 또는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지역 및 사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신뢰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향후 사회통합을 위한 훌륭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현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세대의 몫이다. 관용과 존중, 배려가 있는 건강한 미래사회를 기대해 본다.

글 _ 유연희

▶ 관련자료

박명호·오원근·이영섭·한성범(2013) 지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연구 : OECD 회원국과의 비교분석, 경제학연구, 제61집 제4호 pp.5-35.
오오하시켄사쿠(2007) 지역복지와 복지교육, 푸른북.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노인을 위한 주거정책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5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확충해나가고 있는데, 캐나다 중앙정부의 경제계획에 따라 주 정부의 예산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캐나다 최초로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돌봄시설을 도입하였으며 IL-BC 프로그램(Independent Living BC Program)을 통해 정부지원 돌봄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IL-BC 프로그램은 간호와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가정돌봄과 요양원의 중간 지대에 해당하는 주거 공간(subsidized assisted independent living)을 제공한다. 이러한 형태의 정부 지원 돌봄주택은 부분적인 돌봄은 필요하지만 요양원처럼 24시간동안 제공되는 전문적인 돌봄서비스까지는 원하지 않는 노인들의 필요를 맞추기 위해 탄생되었다.

돌봄주택은 주로 7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건강, 영양, 안전 등에 우려할만한 사항이 있어 정기적인 방문서비스가 필요한 이들 위주로 제공되며, 기존 가정방문지원 서비스로는 더 이상 자가 거주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을 위한 정부지원 돌봄주택은 숙박, 식사, 청소, 세탁, 여가활동 기회, 이발 및 미용, 이동수단, 의료 및 24시간 대응서비스를 제공한다. IL-BC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으려면 위에 열거된 모든 서비스를 필요로 해야 하며, 자신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사표현능력과 결정능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내에는 총 4,376개의 정부지원 돌봄주택이 있다. 이 프로

그램은 캐나다 연방정부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 캐나다 모기지 및 주택회사, 지역의료기관, 민간 및 비영리 주택사업자들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정부지원 돌봄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노인들은 세후 소득의 70%를 거주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주택정책을 관장하는 주택관리위원회(BC Housing Management Commissions)와 지역의료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2014년 1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발표한 주택정책계획안인 'Housing Matter'에서는 총 6개의 주택정책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안정적인 주거 공간, 2) 취약계층 우선지원, 3) 토착민들을 위한 주택 (aboriginal housing), 4)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5) 자가주택 소유자 지원, 6) 주택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다. 노인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두 번째 취약계층 우선지원에 포함되어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다양한 사회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총 200여개의 지역 사회 내 98,000 가구에 대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2001년 이후 노인들이 가족과 친구가 거주하는 익숙한 동네에서 최대한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어진 돌봄주택과 노인지원주택의 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전체에서 5,000개를 넘어섰다고 한다.

주택정책의 기초를 '지역공동체 강화'에 맞추고, 노년기에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주택정책은 우리의 주택 및 노인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글 _ 전체경

▶ 관련자료

BC Housing Management Commission의 Independent Living BC 소개

<http://www.bchousing.org/Initiatives/Creating/ILBC>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주택정책 계획 'Housing Matters BC - Housing strategy for British Columbia : A foundation for strong communities'

http://www.bchousing.org/resources/About%20BC%20Housing/Housing_Matters_BC/Housing-Matters-BC.pdf

맞벌이 가정을 위한 든든한 도움, 은퇴인력 양육 지원

국내 사정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맞벌이 부부와 여성 경제활동률이 증가함에 따라, 육아에 조부모 또는 은퇴한 친지(50세 이상)의 도움을 받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2013년 노동조합총협의회(TUC: Trade Union Congress)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1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 중 45%가 자녀 양육시 조부모에 의지하고 있다. 또한, 50세 이상 인구 중 58% (약 7백만명)가 정기적으로 조손자녀 양육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관여의 가장 큰 이유는 맞벌이 부모 지원과 양육비 절감이었다. 그러나 이런 높은 조손 양육 참여율에 비해, 최근까지 영국 내 조부모 및 친지 양육에 관한 정치적 관심은 거의 전무했다.

영국 자유민주당은 2013년 9월, 조부모 및 친지 양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서비스 지원 필요를 처음 발표했다. 특히 일하는 조부모의 육아 휴직, 양육 수당 등의 지원을 다음 선거 공약으로 공식화 했다. 또한, 조부모 양육의 사회적 관심 증가와 관련 비영리 단체의 노력으로 최근 여러 사회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부모 양육 지원 비영리기관인 Grandparent plus와 Family and Childcare Trust가 파트너십을 이뤄 운영하고 있는, 조부모 및 친지양육 지원 사업인 'The Relative Experience Project'이다.

이 프로젝트는 로또 펀드(Big Lottery Fund Silver Dreams Fund)로부터 100만 파운드를 수령하여, 2014년 3월부터 3년간 뉴캐슬 지역을 시작으로 영국 북

쪽 지역의 경제적 및 사회적 소외를 겪고 있는 가정에 지원한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인 Grandparent plus는 프로젝트 파트너인 Family Lives와 함께 50세 이상 친지 양육자 및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고 이들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자원봉사자들을 양육 지원이 필요한 가정과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Family and Childcare Trust는 이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사업 보금을 담당한다. 현재 시범사업이 뉴캐슬 지역에서 완료된 상태이며, 이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자선단체인 Coram은 친지 양육자들의 행복(well-being)과 자립성, 위기 상황 대처능력이 향상되었고, 자원봉사자들의 자신감이 향상되었음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가 영국 내에서 조부모 및 친지 양육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하며 큰 규모로 지원하는 첫 사업이니만큼, 향후 3년동안의 발전이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맞벌이 가정의 증가에 따라 양육지원의 부족이 출산율 및 여성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아직도 미미하다. 가정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양육 지원 대책이 시급한 현재, 조부모 및 친지 양육지원은 현 배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인력 활용 및 세대통합에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 여성 경제 활동 활성화와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될 것이다.

글 _ 전미양

▶ 관련자료

- Trade Union Congress(2013.12.17) Nearly seven million grandparents provide regular childcare
<http://www.tuc.org.uk/workplace-issues/employment-rights/working-time-holidays/work-life-balance/nearly-seven-million>
- Big Lottery Fund 홈페이지 보도자료(2014.3.1) Grandparent carers in the North East receive dream Lottery funding boost
http://www.biglotteryfund.org.uk/global-content/press-releases/england/010314_eng_sd_grandparent-carers-in-the-north-east
- Grandparents plus 홈페이지 Relative Experience Project 소개자료
<http://www.grandparentsplus.org.uk/relative-experience-project>

지역사회에서의 세대 간 소통 프로젝트 : 괴팅엔시 사례

2013년 11월 베를린에서는 독일 연방가족부(Bundesfamilienministerium)에 의해 매년 실시되는 세대소통상(Generationendialog-Preis) 시상식이 열렸다. 세대소통상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해당 사업의 결과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질과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이다. 시상 대상은 세대소통과 관련된 모든 세대통합 프로그램, 프로젝트, 그리고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다. 2013년에는 괴팅엔시 노인공동생활가정협회(Freie Altenarbeit Göttingen)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우리 - 세대가 미래를 형성한다(Wir in der Region-Generationen gestalten Zukunft)”라는 프로젝트가 시상식의 주인공이 되었다.

괴팅엔 프로젝트의 골자는 주거공간이 제3의 사회적 공간이고 세대 간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이동식 주거상담을 제공하고, 노인들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젊은 세대와 함께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것이다. 세대통합을 위한 마을개혁과정(Dorferneuerungsprozess)과 이웃 간 도움(Nachbarschaftshilfe) 활성화가 이동식 주거상담 및 세대 간 만남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8년 9월부터 상담서비스를 운영했으며, 이동 상담 및 실행팀은 노인들에게 복잡해진 일상생활 공간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준다. 특수하고 개인적인 생활방식,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기본구조와 사회복지구조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현지에 적합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노인들은 거주지역에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서비스기관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는다. 세대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이야기 카페(Erzählcafé) 등과 같은 세대

간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음식 지원, 이동서비스, 일상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도 있다.

또한 세대통합적인 이웃 간 도움망을 형성하고자 하는 마을을 지원하고 협력한다.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공간 활용,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 만남의 장소 마련, 네트워크 및 이웃지원망 형성 등의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배울 수도 있다.

세대통합적인 마을은 노인들이 자신이 살아왔던 환경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안정감을 가지고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사회 노인인구의 증가를 더 이상 위협요인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연령에서 나오는 현명함으로 연대적인 시민사회를 여는 길의 시작이라는 인식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도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폭넓은 지원은 노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세대통합 프로젝트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이동돌봄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의 노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적극적이고 연대의식을 갖춘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노인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사회적 책임감과 세대 간 연대의식이 강화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이웃 간 소통 뿐만 아니라 세대 간 소통도 아우를 수 있는 사회통합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글 _ 박은정

▶ 관련자료

괴팅엔시 노인공동생활가정협회(Freie Altenarbeit Goettingen) 홈페이지 <http://freiealtenarbeitgoettingen.de>
세대소통상(Generationendialogpreis) 홈페이지 <http://www.generationendialog.de>

사회연대성에 기초한 노인정책 : 개인자립수당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복지정책은 정책의 기저를 ‘연대’라는 철학적 개념에 두고 개념 실천을 정책을 통해 이루어가고 있다. 노인복지정책 역시 노인들의 가족연대와 세대연대 그리고 사회연대 형성을 주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같은 노령연금은 은퇴 이후의 삶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노인들이 사회소속감을 통해 연대성을 형성하도록 마련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것은 자립이 불가능한 부양노인을 위한 정책이다.

부양노인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자립수당(APA: 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이다¹⁾. 프랑스의 노령관련 사회보장 지출은 전체 사회보장지출의 39.4%로 재정 면에서 복지정책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프랑스 정부도 복지재정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APA의 경우에는 채원조달방법을 조세에서 본인부담금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공공부조성격의 기본정책을 유지하면서 재정 감축 없이 소득재분배나 고용을 창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APA의 실행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데, 재정 면에서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되기를 바라지만 지방정부는 부족한 재정은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정부가 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다른 문제는 전국적인 포괄성이나 보편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노인보호시설협회에서는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크지 않다고 발표하였지만, 지방정부마다 인구학적 특성, 사회·환경적 요인, 재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의 실행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역 간 연대형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포괄적인 정책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2011년 오프-가론(Haute-Garonne) 지방정부에서는 APA 이용을 위한 부양정도 측정방법과 수급자의 이전소득에 대한 정확한 재원파악의 어려움²⁾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전문가와 행정가들도 이 제도의 연대성 효과를 방해하는 문제점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첫째는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지역 간의 사회 환경적 차이로 정책 효율성이 다르게 나타나 지역 간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 제도의 운영에 참가하는 정책입안자, 정책수혜자 그리고 시민단체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확장된 연대인 국가와 국민의 연대 그리고 단체와 개인의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는 개별적 상황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이다. 이 문제는 오늘날 프랑스 정부가 중요시하는 개인 환경을 고려하고 있는 정책으로 사회적 배제계층을 최소화하는 사회연대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복지의 기본철학을 연대 형성에 두고 실천방안 개선에 국가적 노력을 하고 있다.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연대성 형성을 위해 여러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가족 참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가족과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는 진정한 연대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글 _ 이은주

▶ 관련자료

노인주거시설협회 홈페이지(2014.4.9) <http://www.ehpad.fr>

사회건강부 홈페이지(2014.4.5) <http://www.social-sante.gouv.fr>

오프-가론 지방정부(Conseil Général de la Haute-Garonne) 홈페이지(2014.4.4) <http://www.haute-garonne.fr>

1)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자립기준평가들, 지원체계, 지원서비스 등은 유사하나, 의료보험의 6.55%를 노인장기요양보험비로 추가 부담하는 우리나라의 달리 재정을 본인 부담금 없이 조세로 총당하는 보편성에 기초한 연대개념이 내재된 사회복지정책의 하나로 운영된다.

2) APA가 수혜자의 마지막 소득에 근거해 책정되고 재산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층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세대 간 연대 강화를 위한 활동적 고령화 (Active Ageing) 정책

유럽연합 내 노년층 인구가 급증하며 회원국들은 노년층 인구를 노동시장과 복지체계에 어떻게 유입해야 할지 그리고 점점 더 심화되는 노령화 현상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유럽에서는 2010년에서 2060년 사이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7.4%에서 29.5%로 증가하고, 80세 이상 인구는 세배 이상 증가하여 1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 내 생산가능인구는 14.2%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연금, 의료서비스, 장기적인 돌봄서비스 등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2012년 한 해 동안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고 노인인구의 활발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홍보하는데 집중하였다.

2012년을 ‘활동적 고령화와 세대 간 연대 강화의 해(The 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로 정해서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층 인구를 양산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였다. 이 때, 활동적 노화와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19가지 원칙이 발표되어 회원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에게 구체적인 지침과 정책 평가기준을 제공해 주었다. 이 19가지 원칙(the guiding principles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은 총 3가지 분야로 나뉜다.

먼저 고용 분야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 교육 및 훈련 지속, 2) 근로자의 건강과 웰빙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3) 나이에 따른 맞춤형 커리어 및 근로 조건 조정을

통한 조기 은퇴 방지 등 노령화 관리 전략 확립, 4) 노인 인구를 위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5) 연령에 의한 차별 방지, 6) 고용친화적 세제(tax system) 및 복지서비스 체계 수립, 7) 고령 근로자의 경험 전수 기회 증대, 8) 일과 돌봄에 대한 책임 양립이다.

다음은 사회참여 분야이다. 9) 노인 인구의 소득 안정성 증대, 10) 노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 증대, 11) 노인 주도 자원봉사활동 증설, 12) 평생교육기회 확대, 13) 노인정책 의사결정과정 참여 독려, 14) 비공식 보호자(가족 내 돌봄서비스 제공자) 지원이다.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삶 분야에서는 15)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 최대화 및 질병 예방, 16) 노인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주거 공간 및 서비스 제공, 17) 접근성이 좋고 저렴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18) 전연령을 아우르는 환경, 재화, 서비스 창출, 19) 장기 돌봄서비스 수혜자의 자율성 최대화가 유럽연합이 활동적 고령화를 위해 세운 원칙들이다.

이외에도 노인 인구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활동적 고령화 지수(the Active Ageing Index)’가 개발되었고,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유럽혁신파트너십(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Active and Healthy Ageing)에서는 건강한 상태에서의 기대수명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인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예방, 교육, 노인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필요에 맞춘 장기 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글 _ 전채경

▶ 관련자료

- 유럽연합 Active Ageing 홈페이지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62&langId=en>
- 유럽연합의 Active Ageing을 위한 19가지 원칙 <http://europa.eu/ey2012/ey2012main.jsp?langId=en&furtherNews=yes&newsId=1743&catId=970>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Active and Healthy Ageing’ 소개페이지 http://ec.europa.eu/research/innovation-union/index_en.cfm?section=active-healthy-ageing

세대 간 통합을 위한 ‘공생케어’

소자고령화사회 일본에서는 세대 간 통합을 위한 시도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핵가족화가 진행되어 조부모와의 교류가 줄어든 어린이들, 반대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혹은 자식들이 도시로 상경하여 지방에 남은 노부부들 등 세대 간 교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각 분야에서는 세대 간 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으로 노인시설 입소자와 보육원 아이들 간의 정기적인 교류활동을 추진하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행사성이 강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세대 간 통합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대 간 통합을 위한 활동으로 주목받는 곳은 바로 공생케어를 실시하고 있는 토야마현(富山県)의 NPO법인 ‘코노 유비 토마레(지역하면, 이 손가락에 땀취리며, 여기 모여라는 뜻이다)’이다.

코노 유비 토마레는 토야마현에 소재한 적십자 병원을 퇴직한 3명의 간호사들이 1993년에 개설한 곳이다. 이들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만난 환자들이 최후의 순간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거나 타타미(온돌) 위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면 우는 적지 않은 노인들을 목격하며, 병원의 한계를 느껴 이러한 노인들을 돕고자 설립하였다.

이곳은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장애가 있던 없든 누구든지 함께 돌보는 활동방식을 고집한 선구적인 곳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상화(normalization)를 실현하고 있는 곳이며, 데이 서비스가 그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곳의 큰 특징으로는 토야마현이 지자체 차원에서 유연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대상자별로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분절되어 있으며, 보조금 지원시 마찬가지로 분절된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토야마현에서는 이러한 틀

에 구애받지 않고 토야마현 독자적인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보조금 지원형태를 포함하여 ‘토야마형’ 활동이라고 불린다.

즉,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장애 유무에 상관 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한 복지시설로 세대 간 통합을 위한 ‘공생케어’가 실시되고 있다.

현재, 주요한 활동내용으로는 노인재가지원 서비스(주간보호), 장애인(아) 재가지원 서비스(생활케어, 방과후 아동 주간보호 등), 케어플랜 작성(개호보험관련), 그 외에도 영유아 일시보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재가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하루 평균 32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는 일반아동, 장애아동,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하다.

이용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오후 8시까지도 이용 가능하다. 28명의 직원과 6명의 유상 자원봉사자, 40명의 무상 자원봉사자에 의해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아무런 제도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이용시 2,500엔 혹은 3,750엔(수발이 필요한 상태에 따라 구분된다.) 반나절(4시간) 이용시 1,500엔 혹은 2,000엔으로 오후 6시 이후에는 1시간당 700엔의 이용료가 발생한다. 참고로 개호보험제도나 장애인 자립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각 제도 이용요금이 적용된다.

이러한 활동은 전국 복지관계자들에게 공감을 얻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제도화 및 시책화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으며, 공생케어가 보급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 일본 내 대상별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독자적인 보조금 지원이 정비되지 않고는 이러한 공생케어 활동의 확대 및 보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글 _ 김원경

▶ 관련자료

코노 유비 토마레(このゆびと一まれ) 홈페이지 http://www.geocities.jp/kono_yubi/main.htm#start

개호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도시의 힘, 와코시의 개호예방정책

1972년 어느 중산층 가정의 평범한 며느리가 치매 시아버지를 돌보면서 겪는 이야기를 담은 일본의 베스트셀러 '황홀한 사람(恍惚の人)'. 이 소설은 일본에서 노인 수발의 사회적 책임을 증폭시키는 촉발제가 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2000년 4월 개호의 사회화를 목적으로 한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2014년 현재까지 총 세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일본의 개호보험은 지역포괄 케어시스템과 예방 중시형 시스템을 확립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개호예방사업을 선구적으로 진행해 온 사이타마현 와코시의 개호예방정책이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인구 약 8만 명의 작은 도시인 와코시는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된 2000년부터 제1기 와코시 고령자보건복지계획을 시작으로 2003년 와코시 장수안심플랜(개호보험사업계획, 고령자 보건복지계획)을 책정하면서 개호예방에 대한 독자정책을 펼쳐 왔다. 2006년에는 지역밀착서비스와 고령자용 주택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재는 제5기 계획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와코시 모델을 배우고자 외무성 관료 및 전국 각지의 지자체 등 연간 300곳 이상의 시찰단이 다녀갈 정도로 시의 개호예방정책은 눈부신 성과¹⁾를 내고 있다.

와코시 개호예방사업의 주요 목표는 고령자의 재택 개호와 자립지원이다. 방치하면 요개호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요지원자와 2차 예방사업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예방서비스 제공을 통해 요개호 예비군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진행 중인 5기 계획²⁾에서는 지역포괄 케어시

스템의 구축을 통한 개호보장과 자립지원의 확립을 기본 목표로, 예방개호 및 요개호도의 중증화 예방 추진, 재택개호와 재택의료의 연계강화 및 시설 및 병원 입/퇴원 시 효과적 연계, 지역밀착형 서비스의 효과적 정비, 자립지원을 기본으로 한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포괄적 매니지먼트 추진을 기본방침으로 세웠다.

추진내용 중 주목할만한 점은 우선 설문을 통한 고령자의 욕구 파악 시 미회수자에 대한 시의 대응이다. 보통 미회수자인 경우, 가까이에 가족이 없거나 와상이어서 직접 쓸 수 없는 상황 등 잠재적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경우 직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한다. 조사결과는 개인대장에 등록되고, 개호예방대라는 시스템을 통해 지역포괄센터와 시가 고령자 개개인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다음으로 보험자인 시정촌의 부담비율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재정적 문제이다. 이를 위해 5기 계획기간 동안 시는 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비롯하여 자원봉사 포인트제, 건강 만들기 체험 발표 등 인센티브 부여와 이벤트 개최, 비공식적인 상호활동 등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 요개호 인정을 받지 않는 것은 행복한 것이라는 의식이 침투해 있다. 개호예방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장수안심과 아베 츠요시 과장보좌의 말이다. 와코시 모델이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행정의 선견지명과 시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발신, 그리고 이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글 _ 박지선

▶ 관련자료

동양경제(2014. 2. 28). “개호가 적은 마을, 와코시의 비밀” <http://toyokeizai.net/articles/-/31613>
와코시 장수안심과(2012). 와코시 장수안심플랜-제5기 와코시 개호보험사업계획, 고령자보건복지계획.

1) 와코시의 요개호(요지원) 인정율은 2012년 현재, 9.6%로 2006년 12.0%, 2009년 10.2%에서 서서히 줄어지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2012년 현재 16.8%)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2) 학계전문가 및 서비스사업자, 지역포괄센터의 개호예방서포터, 민생위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책정회의에서 확정됨.

세대별 복지인식 : 복지증세와 복지재원 마련방안을 중심으로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사회통합'이다. 이는 사회갈등, 세대갈등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회복지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미처 돌아보지 못한 사회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들도 발생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제한된 복지자원총량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이는 복지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3년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복지재원 및 대상범위, 정치참여와 성향 등을 조사하였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대별 복지인식으로 차이를 분석하였다. 기초생활수급 여부에 의한 복지인식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분석대상은 비수급가구로 한정하였다¹⁾.

〈표1〉은 비수급가구의 세대별/소득분위별 복지증세 지지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은 낮을수록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복지증세 지지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0.87점이며, 소득분위별 복지증세 지지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0.33점으로, 세대별 인식의 차이

가 소득분위별 인식차이보다 크게 나타났다.

〈표2〉는 노인, 아동, 장애인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이다. 전체적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가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가 24.8%, '기업이 세금, 기부금 등을 내서'가 21.0%로 나타났지만, 세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특히 41~50세 이하 연령대에서는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가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른바 '보편 증세'에 대한 공감대가 가장 높은 연령대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편 증세에 대한 공감대가 낮아지는 것을 고려해보면 40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반응은 '연령 효과'라기 보다는 현재의 40대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코호트 효과'일 수가 있다.

세대별 특징은 복지에 대한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한 복지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욕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속적인 소통구조를 마련하고 세대별,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다층적 복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글 _ 현명이

〈표1〉 비수급가구의 세대별/소득분위별 복지증세지지 (총 3,860명 대상)

연령별 ²⁾	N(%)	비수급	소득분위별 ³⁾	N(%)	비수급
30세 이하	353(9.1)	5.92 ¹⁾	1분위	799(20.7)	6.73
31~40세이하	578(14.9)	6.26	2분위	790(20.5)	6.66
41~50세이하	709(18.4)	6.48	3분위	777(20.1)	6.46
51~60세이하	636(16.5)	6.72	4분위	745(19.3)	6.56
61세 이상	1,586(41.1)	6.79	5분위	749(19.4)	6.40
	3,860(100.0)			3,860(100.0)	

주 1) 7점 척도 => 10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2)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p=0.000)
 3) 소득분위 구분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분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유의수준은 연령별 차이에 비해 높게 나타남(p=0.15)

〈표2〉 비수급가구의 세대별 노인, 아동, 장애인을 위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구분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내서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기업이 세금, 기부금 등을 내서	종교단체 등이 기부금 등을 내서	단위 : %	
						기타	전체
30세 이하	6.5	24.1	43.6	21.1	2.8	0.8	100.0
31~40세 이하	3.8	23.4	43.1	25.2	3.3	1.2	100.0
41~50세 이하	4.7	30.3	40.3	23.0	1.4	0.3	100.0
51~60세 이하	3.3	25.2	46.9	21.5	3.0	0.2	100.0
61세 이상	2.6	22.9	53.1	18.1	3.0	0.3	100.0
전체	3.7	24.8	47.4	21.0	2.7	0.4	100.0

▶ 관련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3)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 <http://www.koweps.re.kr/>
 이현주 외(2013),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재홍(2010),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 권력·이념·문화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3권 제3호, pp.75~99.

1) 수급가구의 경우,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 복지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이 기존 연구와 상이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이현주 외(2013) 참조.

복지이슈Today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내외 복지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창간된 월간지입니다.

- 본지는 서울시복지재단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 (복지자료 → 복지이슈Today)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발간에 관련된 문의사항과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간팀(연구개발실 정책연구팀, 02-2011-0570, jkim@welfare.seoul.kr)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서울시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www.welfare.seoul.kr

110-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Tel. 02)2011-0570 Fax. 02)2011-0520